

## 한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연구고찰 :

일본 1억총활약플랜 개요를 중심으로

전호성 강남대학교

---

### 논문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와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이미 겪고 있는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 정책, 특히 아베(安倍)정권 이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일명, 일본 1억총활약 플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이를 차기(次期)(제4차) 또는 차차기(次次期)(제5차) 계획수립시의 개선방안으로 제언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미래청사진(국가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명확하고 냉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하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저출산고령사회, 한일, 장기요양, 저출산율

## I. 서론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8년도 합계출산율은 0.9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총 출생아 수는 32만7천명이었다. 이 수치의 발표는 우리사회에 재차 ‘저출산’이 위기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5를 기록하며, 국가적의 위기에 봉착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당시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sup>1)</sup>하였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었다.

동법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점. 둘째, 저출산대책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셋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점. 넷째, 저출산·고령사회

1) 2005년 5월18일 제정, 2005년 9월1일 시행.

위원회의 설치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이다.

이로써 법 제정 이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년~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년~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년~2020년)이 수립·시행되었고, 또 일부는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0.977이라는 충격적이 수치가 발표되고 정부는 서둘러 2019년 2월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을 발표하게 된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 이후 급속히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05년에 저점(1.085)을 기록 후, 소폭 반등세를 보이거나 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1.239) 이후 급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이후,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에 의한 출산율 제고(提高)는 결코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하기 어려운 수치<sup>2)</sup>였으며,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2006년 이후는 출산율이 급락하였다.

필자는 정부의 의한 기본계획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저출산·고령사회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조급함에 그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인 출산율의 급강하와 더불어 고령화율의 급상승은 당해 정부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곧 정부 스스로에게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시급히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중압감이 가중되어서 장기적이고 명확한 목표<sup>3)</sup>의 부재와 더불어 미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임시방편적인 기본계획

2) 이 점에 대하여 필자는 현시점에서 생각하면 그나마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2007년의 높은 수치는 “황금돼지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효과에 따른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결코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3) 단순히 출산율 제고가 아닌 전반적인 국가의 미래지향적 차원의 목표(국가적

을 수립한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 특히 가까이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명확한 국가적 목적과 그 전략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본 연구가 제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와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를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이미 겪고 있는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 정책, 특히 아베(安倍)정권 이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일명, 일본 1억총활약 플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주제로 발표된 최근 5년간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임현정(2017)의 “일본의 저출산 사회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복지정책변화”, 최인호(2017)의 “일본의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한 연구”, 조성호(2015)의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송지연(2019)의 “저출산·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윤종혁(2017)의 “일본의 ‘1억인 총활약’ 대책에 따른 학교안전교육망의 현황과 과제”, 이강호(2018)의 “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분석”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 연구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베 정권의 저출산고령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인 ‘일본 1억총활약플랜’에 초점을 두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既述한 선행연구 중에서 윤종혁의 연구가 본 연구와 같은 ‘일본의 1억인 총활약’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 연구 역시 본 연구의 핵심과는 상이한 학교안전교육망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의 핵심인 ‘일본 1억총활약플랜’의 본질을 다루는 우리나라 연구에

---

청사진)를 말한다. 예를 들면, 1942년 영국에 발표된 베버리지보고서 수준의 국가적 청사진을 말한다.

서는 첫 시도이다.

## II. 한국-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sup>4)</sup>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화 된 이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절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자체에서 언급한 각 차별 기본계획의 평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절은 다음 절 기술을 위한 전제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간략히 핵심만 서술하였다.

### 1.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평가<sup>5)</sup>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 구현’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위해 ‘점진적 출산을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 체계 확립’”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위와 같은 추진 목표를 지닌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간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로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적극 투자한 결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2005년도 최저치를 기

4) 자세한 내용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을 참고하기 바람.

5)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p.18~36을 필자가 편집 재정리한 것임.

록한 1.08 이후 더 이상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1.2를 회복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환경과 더불어 만혼 심화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여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토대 마련으로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 2013년 60세 정년 법제화, 2014년 기초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등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과, 노인돌봄·요양 지원 강화 및 관련 육성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 높은 노인자살률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자평하였다.

##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의 필요성<sup>6)</sup>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sup>7)</sup>을 추진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핵심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분야별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간 통합·연대 등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화로써 출산 장려를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결혼가족, 3자녀 이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의 pp.1~2를 편집 재정리 한 후 필자의 의견을 가미한 것임.

7) 2017년 12월에서 2018년 3월에 걸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연구를, 2018년 5월부터 동년 12월에 걸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에 걸쳐 인구변화가 노동시장, 교육,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추진하였다.

상 다자녀의 가족관점을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정과제(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아이돌봄, 한부모 양육지원 등), 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를 정비하고 범정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 할 핵심과제 발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효과적 대응방안 제시) 개편 등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시기를 넘는 중장기 핵심과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계획 수립·시행되고 있으나,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次期 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전 계획에 대한 냉철하고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특정 次의 계획뿐만 아니라 제1차, 제2차, 제3차에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보니 특히 이전 계획의 실현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마치 당차 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계금융위기 등의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예기치 않은 외부환경의 변화가 당차 계획의 달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당차 계획의 수립 시의 세밀한 문제점 분석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각 차별로 제시된 수치가 사전(事前)적인 대처가 아닌 사후(事後)적인 측면이 강하는 것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출산율로 출산율 가정에 따른 인구 및 사회경제지표 변화 전망에서 1.00(2035년까지 1.00으로 하락 후 유지), 1.08(2005년 수준으로 유지), 1.4-1.6(2010년 1.4, 2015년 1.6으로 회복 후 유지), 1.4-1.6-1.8(2010년 1.4, 2015년 1.6, 2020년 1.8로 회복 후 유지)등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상적 혹은 희망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전략(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부족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자체가 단순히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만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하는 원인제공이 되어버렸다고, 이는 곧 계획의 긴급 수정을 유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수정안을 서둘러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또다시 명확한 문제점 진단 없이 새로운 대응책을 제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 Ⅲ. 일본-일본 1억총활약 플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즉, 아동 수가 줄어들고 고령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를 지탱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감소를 의미한다. 일본 총무성의 자료에 의한 2015년과 2060년의 변화를 인구수별로 비교하면, 아동인구(1,589만 명-791만 명)와 경제활동인구(7,629만 명-4,418만 명)는 급격히 감소하나, 노인인구(3,347만 명-3,464만 명)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2015년과 2060년의 변화를 각 인구별 비율로 비교하면, 아동인구는 12.6%에서 9.1%로, 경제활동인구는 60.7%에서 51.0%, 노인인구는 26.6%에서 39.9%로 아동인구는 약3%포인트, 경제활동인구는 약9%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약 1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동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 비율에 비하여 절대 인구수 폭이 큰 반면, 노인인구는 증가한 비율에 반해 절대인수(약3,000만 명)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동시에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1970년 193만 명에서 2015년에 101만 명, 2060년에는 48만 명으로 급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사회보장을 지탱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급감(7,629만 명-4,418만 명)은 비율은 증가하나 절대 수

는 큰 변함이 없는 노인인구(3,347만 명-3,464만 명)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로 귀결되었다. 즉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2060년 총인구가 약9,000만 명이며, 고령화율은 약40%(약3,000만 명)로 급증하는 사회보장비용을 급감한 현역세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정부는 “안심하고 희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2012년 2월17일 내각결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후 저출산고령화문제로 인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본 1억총활약 플랜’(2016년 6월2일, 내각결의)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하에서는 ‘일본 1억총활약 플랜’의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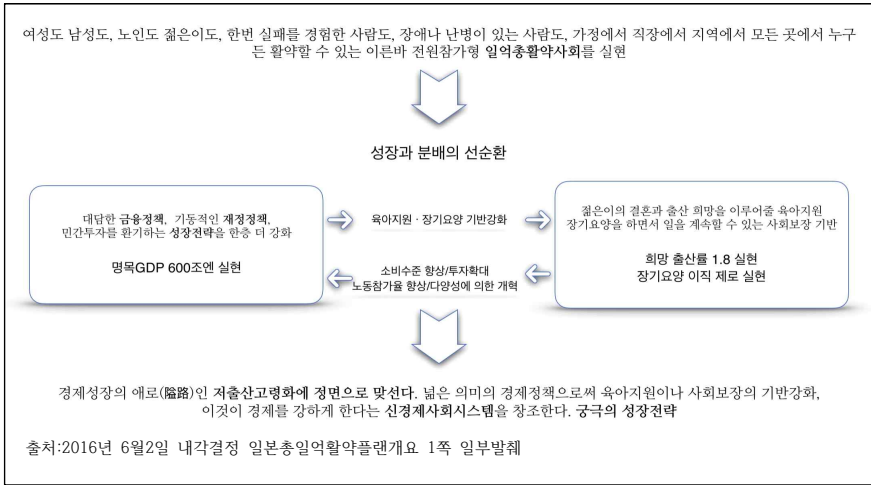
## 1. 개요

*“1억 총활약 사회란 여성도 남성도, 노인도 젊은이도,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장애나 난병이 있는 사람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 활약할 수 있는 이른바, 전원참가형 사회이다”*

이것은 2016년 6월2일 내각결정된 ‘일본 1억총활약 플랜’에서 ‘1억총활약사회’를 정의하면서 내세운 설명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sup>8)</sup>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일본의 인구는 2015년 1억2700만 명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면서 2065년에는 8800만 명(출생 중위, 사망중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활동인구 또한 7700만 명(2015년)에서 4500만 명(2065년, 출산중위, 사망중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술(既述)한 ‘1억총활약사회’는 그 어떤 누구라는 구분 없이 모두가 어디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

8)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17), 일본의 장래추계인구(평성29년 추계), 17쪽.



〈 그림 1 〉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 매카니즘 제시

해서는 1억 명 이하로 감소할 미래 일본의 총인구를 1억 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인구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활약해야만 일본이라는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1억총활약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틀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전제되며, 이를 위하여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의 실현 등 비정규고용의 대우개선, 장시간 근로의 시정, 고령자 취업촉진이라는 ‘일하는 방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매카니즘(<그림 1> 참조)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구든 어디서든 활약할 수 있는 전원참가형 1억총활약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목GDP600조엔<sup>9)</sup>의 실현이 요구되는데 이는 희망출산율 1.8의 실현과 장기요양이직(離職) 제로(0)의 실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목GDP600조엔의 실현은 아베정권의 핵심인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핵심인 대담한 금융정책과, 기동적인 재정정책 및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sup>10)</sup> 젊은이의 결혼과 출산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육아

9) 내각부 통계치에 따르면 2019년 4-6월기 명목GDP는 556조5000억엔 임.

지원과 장기요양을 하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반을 통하여 희망출산을 1.8과 장기요양이직 제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sup>11)</sup>

이 매카니즘은 명목GDP600조엔의 실현으로 육아지원과 장기요양기반을 강화하여 희망출산을 1.8과 장기요양이직 제로를 실현하고, 소비수준 향상과 투자확대, 노동참가율과 다양성에 의한 개혁을 통하여 명목GDP600조엔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애로(隘路)인 저출산고령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경제정책으로써 육아지원이나 사회보장의 기반을 강화하여 이로써 경제를 강하게 한다는 신경제사회시스템을 창조하는 궁극적인 성장전략이 바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매카니즘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의 개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일하는 방법의 개혁으로는 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둘째 장기간 노동의 시정, 셋째 고령자의 취업촉진이다. 먼저 풀타임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프랑스(89.1%), 스웨덴(83.1%), 독일(79.3%), 네덜란드(78.8%), 영국(71.4%), 이탈리아(70.8%), 덴마크(70.0%)에 비하여 일본은 56.6%로 30.3%인 미국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정규 고용의 대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책정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대우 차로서 시정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이 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동관련법의 일괄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 근로시간 49시간 이상의 노동자 비율이 일본은 21.3%로 미국(16.6%), 영국(12.5%), 프랑스(10.4%), 독일(10.1%)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과 육아의 양립이 여성의 캐리어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법규제의 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노동기본법

10) 자세한 내용은 日本再興戰略(2013), 日本再興戰略(개정2014), 日本再興戰略(개정2015), 日本再興戰略(개정2016) 내각결정 참고바람.

11) 희망출산율 1.8과 장기요양이직 제로 실현은 본고의 핵심고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後述하고자 한다.

에 대해서는 36협정(노동기본법의 잔업시간 상한규제 조항)의 나아갈 길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여 장기간 노동을 시정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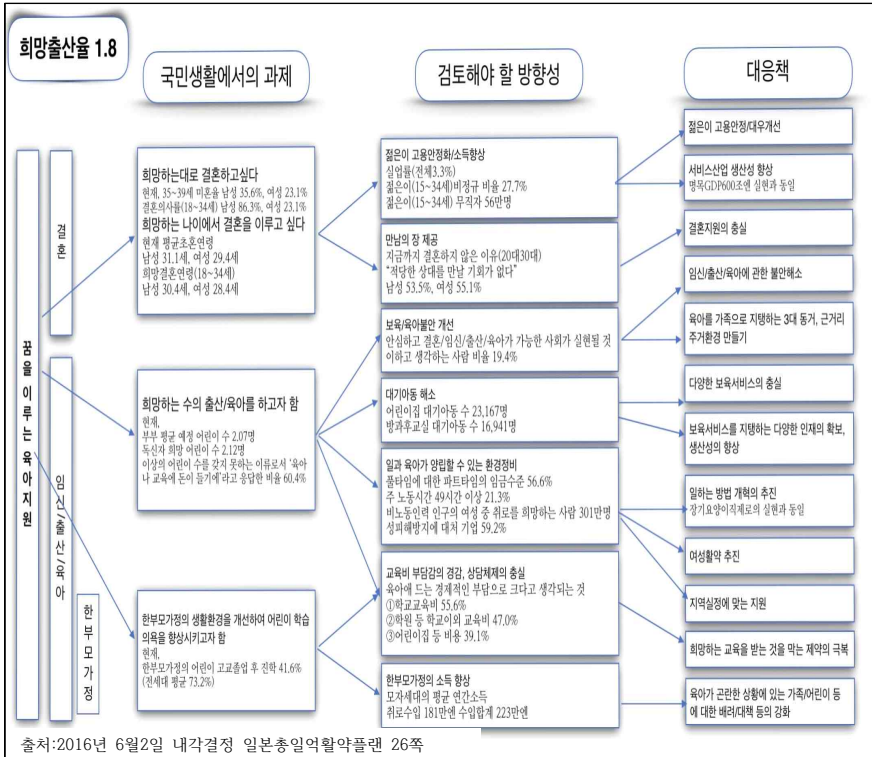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비율이 65.9%이나, 실제 65세 이후에도 일하고 있는 노인은 21.7%에 머물고 있다. 이례 65세 이후의 계속고용연장과 65세까지의 정년연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희망출산율 1.8’과 ‘장기요양 이직(離職) 제로’가 실현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희망출산율 1.8

후생노동성에 의한 2018 인구동태통계의 개황 결과에 따르면 91만 8400명으로 전년 94만 6146명 보다 2만 7746명 감소하였고, 출생률(인구천명대비) 7.4로 전년의 7.6보다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42로 전년의 1.43보다 감소하였다. 한편 최근 약30여 년간의 특수합계출산율의 연차별 추이를 보면 1.66(1988년)을 기점으로 2003년에 1.29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1.37, 2013년에는 1.43으로 미미하나마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2018년에는 1.42를 기록하였다. 즉, 지난 30여 년간에 걸쳐 출산율은 희망출산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여 년을 보더라도 1.4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출산율은 1억총활약사회 실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하여 그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희망출산율 1.8을 달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희망출산율 1.8을 위해서는 ‘꿈을 이루는 육아지원’이라는 목표 하에 결혼과 임신/출산/육아의 두 파트로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에게는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기혼자에게는 자녀를 낳고 육아하기 쉬운 환경정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림 2> 참조)

먼저, 미혼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에의 과제와 검토해야 할 방향성, 그리고 대응책으로 이어지는 수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8~34세의 결혼의사율이 남성은 86.3%, 여성은 89.4%임에도 불구하고, 35~39세 미혼률은 남성이 35.6%, 여성이 23.1% 이르고 있다. 또한 18~34세의 희망결혼연령은 남성이 30.4세이며 여성은



〈 그림 2 〉 「희망출산율 1.8」을 향한 수형도

28.4세이나 평균초혼연령은 남성이 31.1세이고 여성은 29.4세로 나타났다. 이것은 희망하는 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나이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 전체 실업률이 3.3%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5~34세의 비정규 비율이 27.7%이며 56만 명이 무

직자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고용안정화와 소득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둘째, 지금까지 2~30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답변이 남성은 53.5%, 여성은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만남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그 해결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젊은 세대의 고용안정화와 소득향상을 위하여 젊은세대의 고용안정과 대우개선 및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혼지원의 충실화가 그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기혼자에 대한 수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신자의 경우 희망하는 아이 수는 2.12명이고, 부부평균 예정 아이 수는 2.07명이나 理想의 아이 수를 갖지 못하는 이유로 “육아나 교육에 돈이 들기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60.4%에 이르기에 희망하는 수의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육아불안의 개선, 대기아동 해소,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환경정비, 교육비 부담감의 경감과 상담체제의 충실이 검토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 근거로 ①안심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사회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로 낮았다는 점에서 보육/육아불안의 개선을, ②어린이집 대기아동 수가 23,167명이고 방과후교실 대기아동 수가 16,941명으로 다수였다는 점에서 대기아동 해소를, ③풀타임에 대한 파트타임의 임금수준이 56.6%, 주 노동시간이 49시간 이상이 21.3%, 비노동인력 인구의 여성 중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301만명, 성피해방지에 대한 대처 기업이 59.2%라는 점에서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④ 육아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크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학교교육비(55.6%), 학원 등 학교이외 교육비(47.0%), 어린이집 등 비용(3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교육비 부담감의 경감과 상담체제의 충실을 그 근거와 검토해야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불안해소, 육아를 가족으로 지탱하는 3代 동거, 근거리 주거환경 만들기,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 보육서비스를 지탱하는 다양한 인재의 확보 및 생산성의 향상, 일하는

방법 개혁의 추진, 여성활약 추진,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 희망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막는 제약의 극복 등이 그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고교졸업 후 진학이 초세대 평균이 73.2%인 비해 한부모가정의 어린이의 경우는 41.6%로 낮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학습의욕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생활에서의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교육비 부담감의 경감과 상담체제의 충실에 더하여 한부모가정의 소득이 향상이 검토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모자세대의 평균 연간소득이 취로수입 181만 엔을 포함한 수입합계가 223만 엔이었다는 점을 근거이유로 들었으며, 육아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가족/아동 등에 대한 배려와 대책 등의 강화가 그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

희망출산율 1.8을 향한 대표적인 대응책으로 육아환경 정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정비는 크게 육아환경정비와 모든 어린이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정비로 구분된다. 첫째, 육아환경정비를 위해서는 ①보육수용태세 정비, ②보육교사의 처우개선, ③다양한 보육교사의 확보 및 육성, ④방과후 교실의 정비의 네 가지 둘째, 모든 어린이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정비는 ①배움의 기회제공, ②장학금 제도의 확충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먼저 육아환경정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보육수용태세의 정비는 대기아동 해소를 목표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육수용태세를 50만 명 분 확대, 기업주도형 보육을 추진, ②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육교사로서의 기능/경험을 쌓은 직원에 대하여 모든 산업의 여성노동자와의 임금차이를 해소, ③다양한 보육교사의 확보 및 육성은 상환면제형 대부제도 확충과 ICT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의 종합적 대처로, ④방과후 교실의 정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방과후 교실 30만 명 분 확대, 직원 처우개선과 업무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어린이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정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배움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스쿨 카운슬러, 스쿨 소셜워커의 배치 등 교육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프리스쿨 등 학교밖

에서 배우는 어린이를 지원하며, 지역주민의 협력 및 ICT활용 등에 의한 원칙적으로 무료학습지원을 실시하는 지역 미래형 학원 확충한다는 것이다. ②장학금 제도는 무이자형, 유이자형, 급여형, 반환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희망출산을 1.8을 위한 대표적인 기타 대응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응책은 전반적으로 여성활약, 결혼지원의 충실, 젊은/육아세대에 대한 지원, 육아를 가족으로 극복하는 3대 동거/근거리 주거환경 만들기,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함에 있어 곤란함이 있는 자녀/젊은이 등의 활동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여성활약, 젊은이/육아세대 지원, 3대 동거/근거리 주거, 자녀/젊은이 등의 활약지원을 구체적으로 보자. 첫째, 여성활약은 육아 등으로 한번 퇴직한 정사원이 복직하는 길이 열리도록 기업에 유도하고, 어머니 고용안정센터의 확충과 한부모 가족의 자격취득 지원 및 임원 후보단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더육성연수 등 선진적인 대응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젊은이/육아세대 지원은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를 2021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임전문상담센터를 2020년까지 모든 도도부현/지정도시/중핵시에 배치하여 상담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3대 동거/근거리 주거는 대가족, 세대 간이 서로 의지하는 생활스타일을 선택지로서 확대시키기 위한 환경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녀/젊은이 등의 활약지원은 곤란을 안고 있는 어린이/젊은이 등에 대하여 지역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 등의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반주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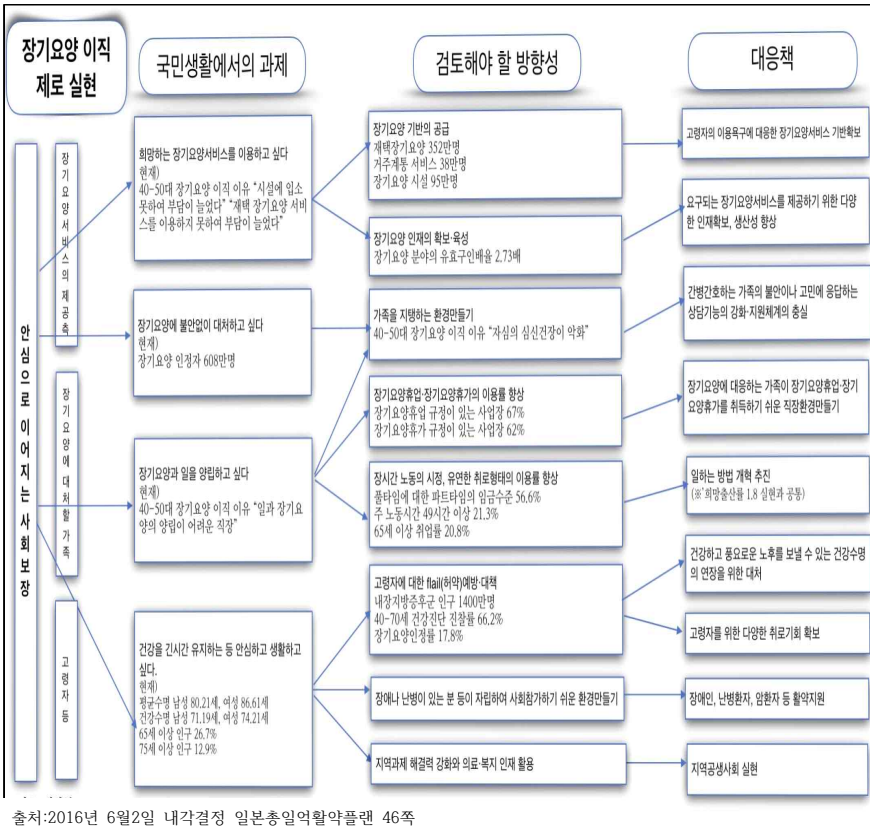
### 3. 장기요양이직 제로(0)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하여 출산율 1.8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장기요양이직 제로이다. 장기요양이직 제로 실현은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을 목표로 ①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촉진과 ②장기요양에

대처할 가족, 그리고 ③고령자 등으로 구분하여 국민생활에서의 과제와 검토해야 할 방향성,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측 부문에서 볼 때, 4~50대의 장기요양 이직 이유가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여 부담이 늘었다”, “재택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부담이 늘었다” 등으로 희망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택장기요양 352만 명, 거주계통 서비스 38만 명, 장기



<그림 3> 「장기요양이직 제로」를 향한 수형도

요양 시설 95만 명의 장기요양 기반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분야의 유요구인배율을 2.73배로 장기요양 인재의 확보와 육성을 검토해야

할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 그 대응책으로는 고령자의 이용욕구에 대응한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확보와 요구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확보 및 생산성 향상이 제시되었다.

둘째, 장기요양에 대처할 가족 부문에서 볼 때, 4~50대의 장기요양 이직 이유가 “일과 장기요양의 양립이 어려운 직장”으로 장기요양과 일을 양립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 휴업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67%, 장기요양휴가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62%라는 현실에서 장기요양휴업과 장기요양휴가의 이용률 향상을, 풀타임에 대한 파트타임의 임금수준이 56.6%이며, 주 노동시간 49시간 이상이 21.3%, 65세 이상 취업률이 20.8%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유연한 취로형태의 이용률 향상이 검토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 대응책으로는 장기요양에 대응하는 가족이 장기요양휴업과 장기요양휴가를 취득하기 쉬운 직장환경 만들기과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이 제시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측과 장기요양에 대처할 가족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문에서 볼 때, 장기요양 인정자가 608만 명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요양에 불안 없이 대처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4~50대의 장기요양 이직 이유가 “자신의 심신건강이 악화”라는 점에서 검토해야 할 방향으로 가족을 지탱하는 환경만들기가 제시되었고, 간병·간호하는 가족의 불안이나 고민에 응답하는 상담기능의 강화와 지원체계의 충실이 그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고령자 등의 부문에서 볼 때, 평균수명이 남성이 80.21세 여성이 86.61세이며, 건강수명은 남성이 71.19세 여성이 74.21세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26.7% 75세 이상 인구는 12.9%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강을 긴시간 유지하는 등 안심하고 생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이를 위하여 내장지방증후군 인구가 1400만 명, 4~70세 건강진단 진찰률이 66.2%, 장기요양 인정률이 17.8%인 상황에서 고령자에 대한 허약 예방과 대책이 검토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동시에 장애나 난병이 있는 분 등이 자립하여 사회참가하기 쉬운 환경만들기, 지역과

제 해결력 강화와 의료·복지 인재 활용이 검토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고령자에 대한 허약예방·대책을 위한 대응책으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대처와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취로기회의 확보가 제시되었다. 장애나 난병이 있는 분 등이 자립하여 사회참가하기 쉬운 환경만들기는 장애인, 난병환자, 암환자 등 활약지원이, 지역과제 해결력 강화와 의료·복지 인재 활용은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장기요양이직 제로를 위한 대표적인 장기요양환경 정비를 살펴보면 ①장기요양 수용 정비 ②장기요양인재 처우개선 ③다양한 장기요양인재의 확보 및 육성으로 요약된다. 첫째, 장기요양 수용정비는 장기요양이직 제로를 목표로 현행 계획 등에서 38만 명 분 이상의 정비를 가속화에 더하여 2020년 초반까지 약50만 명분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인재 처우개선은 경합하는 다른 산업과의 임금차이가 없어지도록 2017년 캐리어 업 구조를 구축하여 월액 평균 1만 엔 상당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장기요양인재의 확보 및 육성은 상환면제형 대부제도의 확충과 고령인재의 활용 그리고 장기요양 로봇이나 ICT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 장기요양이직 제로를 향한 기타 대응으로는 ①건강수명의 연장 ②장애인, 난병환자, 암환자 등의 활약지원 ③지역공생사회의 실현으로 내세우고 있다. 첫째, 건강수명의 연장은 노후가 된 후의 예방/건강증진 대응뿐만 아니라 현역세대부터의 대응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난병환자, 암환자 등의 활약지원은 그들이 희망이나 능력, 장애나 질병의 특성 등에 따라 최대한 활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취업지원 및 직장정착지원, 치료와 직업생활의 양립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장애인의 스포츠, 문화예술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 장애가 있는 어린이도 장애가 없는 어린이도 가능한 한 함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은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지역, 생활, 사는 보람을 함께 만들어 서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공생사회'를 실현하고 이

를 위해 지역의 모든 주민이 역할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자신답게 활약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의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IV. 일본1억총활약플랜의 함의

일본1억총활약플랜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인구(약 1억2천만 명으로 정점이었던 2015년 이후 급속한 감소 추세임)는 2065년에는 8800만 명(중위출산, 중위사망)으로 급감하며, 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는 7700만 명(2015년)에서 4500만 명(2065년)으로 감소가 예측되고 이에 따른 국가 전반에 걸쳐 발생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아베)정부의 종합적인 전략방안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1억총활약플랜의 핵심골자는 향후 급하강곡선을 그릴 인구감소를 완만한 하강곡선으로 완충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체인구를 1억명<sup>12)</sup>선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1억 명으로 감소된 인구로서 현재와 같은 또는 현재보다 더 발전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나 현재와는 달리 모든 사람(경제활동인구만이 아닌)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전체인구가 향후 감소되더라도 1억 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극복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희망출산율 1.8과 장기요양 이직 제로를 실현이다.

첫째, 희망출산율 1.8의 실현은 저출산으로 인한 향후의 인구감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되, 감소 폭을 급하강 곡선이 아닌 완만한 하강곡선으로의 변화를 꾀하여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일정수준의 인구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희망출산율 1.8이라는 수치는 약30여 년간에 걸친 출산율 평균 1.43에 1억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희망이 포함된 수치로 현상태의 수준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정부 대응책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12) 왜 1억 명인가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의미에서 일본정부는 희망출산율 1.8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책을 정부차원에서의 명확한 통계조사가 그 기저(基底)를 이루며, 예를 들어 미혼자와 기혼자의 욕구를 분리하고 각각의 욕구조사를 근거로 내세우는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해결의 일환으로는 장기요양이직 제로 실현을 내세웠다. 이는 고령화에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4~50대가 그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직(離職)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 이유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여도 시설입소가 어렵고, 재가 서비스 이용 또한 용이하지 못하여 가족부담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일과 장기요양의 양립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정부는 장기요양 이직 제로 실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측면과 장기요양에 대처할 가족부문, 고령자 당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종합정리하면, 일본정부는 정부차원의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가전략(비전)으로 전체인구를 1억 명을 내세웠으며, 그 전술로써 희망출산율 1.8과 장기요양이직 제로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 희망출산율 1.8과 장기요양이직 제로가 실현되면 인구 총1억 명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 1억 명으로 감소된 인구로도 현재와 같은 또는 현재보다 더 발전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거나 현재와는 달리 모든 사람(경제활동인구만이 아닌)이 어디서든(가정, 직장, 지역 등)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 V. 나가면서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는 유사한 사회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를 방치해 둘 경우 자칫 국가존립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방법으로 그 대응책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대응책(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판하고 그 해법을 일본의 대응책(일본 1억총활약사회 플랜)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이를 차기(次期)(제4차) 또는 차차기(次次期)(제5차) 계획수립시의 개선방안으로 제언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미래청사진(국가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설득력도 약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국가비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 혹은 미국 등과 같은 인구대국을 목표로 하는지, 서유럽이나 북유럽국과 같이 인구는 적거나 많지는 않지만 강한 나라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명확하고 냉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명확한 국가비전을 전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냉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통계(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단순하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통계(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대응책 또한 단순하고 단기적인 임기응변식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치의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임현정. 2017. “일본의 저출산 사회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복지정책변화”,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185-195.  
 이강호. 2018. “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분석”, 『보건복지포럼』 67-81.  
 윤종혁. 2017. “일본의 ‘1억인 총활약’ 대책에 따른 학교안전교육망의 현황과 과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1:2, 73-91.  
 송지연. 2019. “저출산·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35(3) 106, 157-191.  
 조성호. 2015.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보건·복지 Issue & Focus』 298.  
 최인호. 2017. “일본의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9, 863-885.  
 김하라 역. 2011. 『일하지 않는 재미』 서울: 서울문화사.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1차(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시도 및 교육청,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시도 및 교육청,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대한민국정부,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대한민국정부,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内閣府(平成30年), 人作り革命 基本構想案  
 内閣決定(平成28年), ニッポン一億総活躍プラン  
 内閣決定(平成28年), ニッポン一億総活躍プラン(概要)  
 厚生労働省(平成30年), 厚生労働白書  
 首相官邸 一億総活躍社会の実現 ホームページ  
 (<https://www.kantei.go.jp/jp/headline/ichiokusoukatsuyaku/index.html>)

투고일 : 2020년 4월 20일 . 심사일 : 2020년 5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5월 27일

\* 전호성은 일본 조찌(上智)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임. 저·역서로는 ‘우리나라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왜 사회보장인가?(자본주의 사회보장의 일반이론)’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논문으로는 “통일대비 사회보장권적 기본권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있다.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for a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society in Japan : focusing on ‘the Japan’s plan for dynamic engagement of all citizens’**

Jun, ho sung  
(Ka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basic plan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o draw up problems for self-evaluat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find answers. We plan to consider measures to respond to Japan's low birth rate aging society, which has already experienced similar experiences with Korea, such as low fertility rate and high aging rate, in particular, to consider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policy (Japan's 100 million gross active plan) after the Abe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which were proposed as improvement measures in the 4th or 5th planning. First,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future blueprint (national vision)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a clear and sober situation is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present multidimensional and feasible figures rather than simple and short-term countermeasures.

**Keywords** :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Social welfare in Korea—Japan, Long-term care, Low birthrate